

##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ving ethical dilemmas of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in Korea

이 상 수(Lee, Sang Soo)\*

### ABSTRACT

We are encounter many difficult situations with ethical dilemmas that are sometime difficult to resolve. Ethical dilemmas occur when values are in conflict.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ociety,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has spread widely and massively. The central aim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way to resolve the ethical dilemmas in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or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olving ethical dilemmas of non-profit and non-habitual copyright infringement behaviors in South Korea.

Key words: ethical dilemmas, copyright infringement crime,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 1. 서 론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전송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화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을 맞이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보호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시대에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또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되며 국내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가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른바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미한 저작권 위반행위의 가파른 증가와 법 무법인의 고소대리업무에 의한 남소(濫訴)로 경찰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저작권침해 행위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 부족에 기인한다. 영화·음반파일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위원

복제는 주로 P2P·웹하드 등 콘텐츠 공유사이트 또는 개인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파일 공유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결여된 상태이며 형사처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콘텐츠 공유 규제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실정이 이를 대변한다.

둘째, 저작권법 침해사범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의 저작권 위반 고소의 남소(濫訴)로 인한 부작용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죄의식 없이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진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公訴權)이 없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범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동시에 영화·음악파일 불법공유의 경우 법무법인의 고소에 의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해 조사를 하고 그 후 대부분 합의에 의해 수사가 종결되어 경찰수사가 합의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미저작권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현상은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공히 나타나게 된다. 즉,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의 경우 개인적 수준에서는 법률위반이나 도덕적 책임감 등의 윤리적 갈등(ethical conflict)을 야기하고<sup>1)</sup>, 조직적 수준에서는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다양한 대안간의 선택을 놓고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증가한 스마트폰 보유율과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2010년 5.8%에 불과했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36.2%로 6배가 늘었고, 전체 청소년의 59.7%(남 49.1%, 여 71.1%)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이 같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홍보나 교육마저 부족한 실정에서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 중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일부 로펌 등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결과 수많은 청소년들

1) 디지털화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하는 정보통신 환경을 맞이하여 개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택한 정보를 관련 비용지불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하게 복제·가공·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정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적법성 또는 불법성에 대하여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된다.

2) SNS는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이다(Wikipedia, 2012). 즉, SNS(Social Network Sites)는 개인들로 하여금 1) 특정 시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2) 그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록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3) 이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 그리고 그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Boyd & Ellison, 2008). 이제 SNS는 인터넷 서비스의 주류가 되었으며, 상업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빅데이터로 간주되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분석되는 데이터 소스다. 또한 SNS를 통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개인적 게시물의 지적 재산권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의 연령이나 피해금액의 차별을 두지 않고 침해유형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는 영리 목적의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sup>3)</sup>가 아닌 청소년의 비영리적 비상습적 경미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조직적 수준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청소년의 경미저작권 침해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계속 남겨둘지 아니면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일정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인지 갈등을 겪게 된다.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 인터넷 문화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성인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상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저작권법 위반 등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감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윤리적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경찰청과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의 저작권법 유관기관의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통계자료와 저작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OECD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저작권 관련 학계 전문가와 경찰청 수사국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토론 등을 통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방법을 활용하여 경미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1. 저작권법 및 경미저작권 침해의 의의와 내용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 시, 음악, 미술 등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타인에게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송영식·이상정, 2009; 오승중·이해완, 2007).

3)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저작권의 기본정신은 창작물의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공중에서 사상과 내용을 전파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사·배포·공연·전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한 권리보호 못지않게 사회전체적으로 문화발전이란 더 큰 공익을 위하여 이용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허인, 2011)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의 제정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은 저작인접권과 함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으로 구성되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중송신권이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 및 유통의 저렴성·용이성과 변경과 조작의 신속성·광범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경미 저작권 침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상습적으로 영상·음악·출판물 등의 저작권을 인터넷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포털·웹하드·P2P 등) 등 콘텐츠 공유사이트 또는 개인블로그·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해 불법 복제·전송·공유하는 일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만, 초범이라 할 지라도 저작권 침해 정도가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정도로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나 권리자의 저작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또는 해비 업로더처럼 영리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경미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비영리·비상습적 저작권 침해범죄의 경우 비범죄화를 통해 통고처분·과태료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상수, 2008: 14).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장본인은 불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다. OSP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 또는 전송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웹하드·P2P사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는 크게 포털과 P2P, 웹하드와 P2P의 단점을 보완한 토렌트(bit torrent)로 구분할 수 있다<sup>4)</sup>. 포털(Portal)은 사전적

4)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인 의미로 '현관' 또는 '관문'을 뜻하는 것으로 포털사이트란 집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현관처럼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로 인터넷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다음(Daum), 네이버(Naver), 야후(Yahoo) 등의 종합포털을 말한다.

P2P(peer to peer)는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웹하드(webhard)는 일정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서비스로 일정한 용량의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확보해 디스켓이 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대용량 자료의 자유롭고 편리한 파일공유·전송·저장기능으로 불법저작물의 침해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 2.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s)는 윤리적 기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상황을 의미한다. 즉, 똑같이 비중 있는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상황에 직면한 행위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 간의 선택을 놓고 심각한 윤리적 갈등을 겪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어떤 문제상황에 처한 행위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duties) 혹은 책무(obligation)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어떠한 실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로서 윤리적 갈등(ethical conflict)으로도 불린다.

윤리적 딜레마는 조직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행정인의 경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서 곤란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공직사회에서 윤리적 갈등은 환경적·조직적·개인적 수준의 세 가지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환경적 수준에서의 윤리적 갈등은 전체사회와 공직사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며 조직적 수준의 갈등은 보조적 목표 간의 상충관계에서 발생되고,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개인의 사익과 공익 간의 상충을 의미한다(김택, 2010 Stahl, 1971; Buchanan & Millstone, 1983).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는 대체로 이론적 수준과 현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학문 분야별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는 온라인 통신망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으로, PC 통신 사업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인터넷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먼저 행정학 분야에서는 주로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행정책임과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윤리적 딜레마를 이론적으로 연구(김택, 2010)하거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회피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논의되었다(Boughman, 2007).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윤리적 딜레마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오혜경, 2007). 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본적인 윤리적 딜레마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선(good)을 산출하는 작위 의무로서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극적 의무)와 다른 하나는 해(harm)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부작위 의무로서 복지대상자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소극적 의무)이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조직내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논의와(남미정·곽선화, 2011), 기업경영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윤리적 의사결정 전 과정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었다(Browne, Giampetro Meyer, and Williamson, 2004; Trevino and Nelson, 2004; Green, 1994; 이관춘, 2007).

### 3.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분석틀

일반적으로 기업 윤리경영 분야에서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Trevino and Nelson, 2004). 즉, 윤리적 인식, 윤리적 판단, 그리고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이 세 단계는 의사 결정자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이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자료 : Trevino, L.K., and K. A. Nelson(2004). p.15, 이관춘(2007). p.135를 토대로 재구성

기존 선행연구에서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그 결정이 합법적인가?, 그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다루는가?, 그 결정에 대해 심적 편안함을 느끼는가?”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lanchard and Peale, 1988). 첫째 질문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분석은 아예 포기하라고 강조한다. 즉, 윤리적 판단의 필수조건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 2>는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흐름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2>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의 흐름



한편,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윤리감사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각 기관마다 윤리적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의 정책과 절차가 ‘매우 윤리적’(1점)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험수위’(4점)에 올라가 있는지를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Reamer, 2000). 이 중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에 대한 감사 척도를 보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윤리적 결정에 대한 윤리 감사 척도

내 용	척 도			
(1) 직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는 능력	1	2	3	4
(2) 윤리적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친근성	1	2	3	4
(3) 윤리이론이나 원칙이나 지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친근성	1	2	3	4
(4) 윤리강령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친근성	1	2	3	4
(5) 법적 원칙들(현재 실행법들, 규제, 그리고 법적 결정사항)	1	2	3	4
(6) 윤리자문(기관 스텝, 수퍼바이저, 행정가, 윤리전문가, 윤리위원회)	1	2	3	4
(7) 윤리적 결정의 문서업무	1	2	3	4
(8) 윤리적 결정사항의 모니터링과 평가	1	2	3	4

자료: Raner, Frederic G(2000). "The Social Work Ethics Audit: A Risk-Management Strategy", Social Work, 45(4):355-366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 Peal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변형하여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갈등해결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첫째, 경미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위반사범의 처벌 결정(대상, 범위, 내용 등)이 합법적인가?

둘째,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다루는가?

셋째, 청소년의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결정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경미저작권 침해 청소년들의 처벌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따른 위반사범의 처벌 결정(대상, 범위, 내용 등)이 합법적인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은 원칙적으로 성인과 청소년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즉, 저작권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실명의 등록 및 등록의 효력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업을 한 자, ④ 저작권법상의 침해 간



주행위를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침해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되는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대체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의지를 고취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적절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비영리적·비상습적 저작권 위반행위를 성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할 경우 전과자란 낙인효과를 가져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대리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의 부담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있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침해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당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의 정부기구이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최초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된 이래 5년 연속으로 제외되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는 주로 포탈(Potal)·웹하드(webhard)·P2P 등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는 보다 강력한 역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네티즌의 ID, IP주소 등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또는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결정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범죄의식이 희박한 청소년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까지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우선 범죄라는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무료공유사이트의 프로그램이나 영화·음악파일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나 업로드 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힘들다. 더구나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친고죄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한 후 경찰수사를 합의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일선 수사경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5)</sup>.

5)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인력이 과다한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경찰 공권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하고, 마약·지능범죄, 테러 등 새로이 발생하는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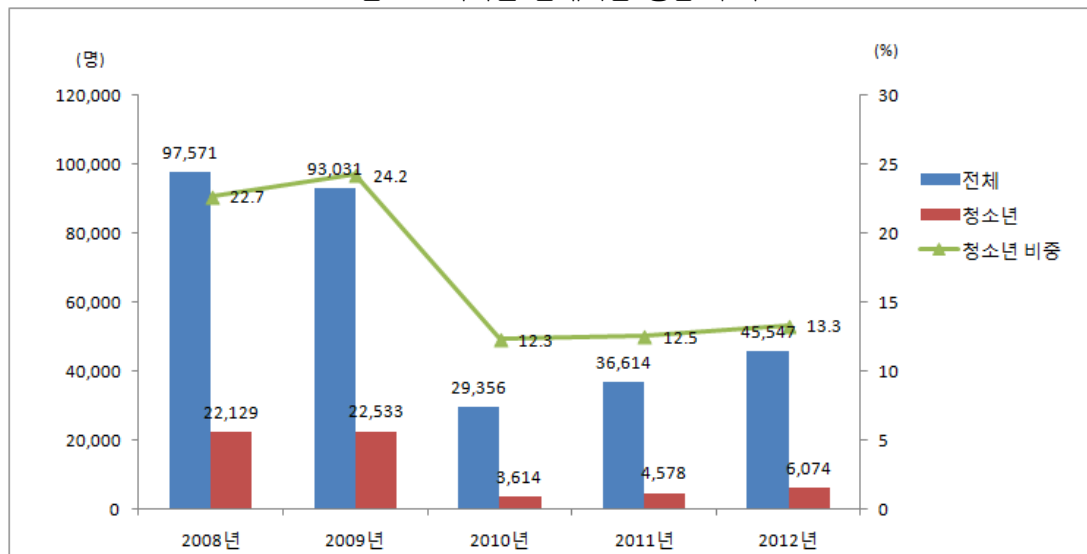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 초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미저작권 침해행위의 비범죄화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범죄화 방안으로 저작권 교육이수 조건부 경찰서장 훈방권이나 통고처분<sup>6)</sup>을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Ⅲ. 저작권법 침해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 1. 저작권 침해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 음악이나 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 게시 등 저작권 침해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매우 낮고 사회적 홍보나 교육마저 부족한 실정이다(대검찰청, 2009).

<그림 3> 저작권 침해사범 증감 추이



\* 저작권 침해사범은 저작권법과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자수를 포함한 것임.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제2권 발간 보도자료. 2013년 9월 4일.

안수요에 경찰력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 수사관 설문조사로 사건 처리시간을 산출한 바, 저작권법위반 수사는 통상 5.2시간이 소요되고, 연간처리건수('08년 57,302건)로 계산하면 년 144명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경찰청, 내부 보고자료, 2009).

- 6) 통고처분이란 행정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란 금전적 제재의 부과를 통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면 당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과잉형벌문제를 해결하고 비범죄화의 정신에 접근한 제도이다(김정순, 2011: 58)

범죄의식이 낮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하게 저작권 침해행위 고소가 일선 경찰서로 접수되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침해사범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침해사범 수가 93,031명에서 29,35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저작권 침해사범 수는 45,547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평균 8,096명 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연구학교·체험교실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은 여전히 심각하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은 2010년 확 줄었다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와 청소년의 60% 정도가 계정을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614건으로 2009년 2만 2,533건에서 83.9%(1만 8,919건)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반사례는 2011년 4,578건으로 전년 대비 26.7%, 2012년 6,074건으로 32.7%나 증가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이용한 불법 콘텐츠는 음악(48.7%)이었고, 사진(19.7%), 영화와 드라마(13.8%), 게임(6.1%), 소설과 교재(4.1%), 만화와 캐릭터(4.0%), 컴퓨터 프로그램(3.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침해 추세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사한 정품 콘텐츠 구매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작권 체험교실에 참가한 청소년 6,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정품 음악 콘텐츠를 구매한 비율이 48.5%로 2010년의 61.9%에 비해 13.4%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게임은 0.9% 떨어진 4.8%, 만화와 캐릭터는 1.3% 떨어진 2.6%로 나타났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는 0.5% 늘어난 9.4%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SNS를 꼽는다. 2010년 5.8%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36.2%로 6배가 늘었고, 전체 청소년의 59.7%(남 49.1%, 여 71.1%)가 SNS계정을 소유하고 있다(서울신문 2013. 3. 8).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만 2,842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저작권 지수는 75.1점으로 나타났다. 2011년 73.8점에 비해 1.3% 상승한 수치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지수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지식수준 정도인 '인식지수'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표인 '의식지수'의 합을 말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저작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2년 저작권 의식지수는 67.7점으로 저작권 인식지수 74.4점 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저작권 지수가 작년 대비 4.09% 상승한 반면에 여학생은 0.9% 하락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75.7점, 74.5점을 기록했다. 초·중·고등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76.7점, 중학생이 64.3점, 고등학생이 74.5점으로 고학

년일수록 저작권 지수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지방소도시 학생들의 저작권 지수가 낮았다.

한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16%, 중학생 58%, 고등학생 84%는 ‘인터넷에서 영화 또는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다’고 답했다.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킨다’고 답한 학생도 각각 47%, 68%, 73%로 조사됐다(홍사단, 2013).

## 2.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개정과 일부 수정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불법사이트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일환으로 대검찰청은 지난 2009년 3월 1일 부터 피고소인이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불기소하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소 사건 각하제도 대상자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sup>7)</sup>.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면책 조치로서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대책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된다(대검찰청, 2009).

그러나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2013년 2월 28일까지 시한이었지만 최근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보상금을 노리고 청소년 대상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시 1년 연장되어 2014년 2월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 교육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하도록 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도 시행하고 있

7) 현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각하제도는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 처분(각하)의 일종이다.

다. 또한 저작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강력한 단속 일변도에서 저작권 교육 확대와 공정 이용 활성화로 전환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주요사업으로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 확대, 저작권 연구학교 체험교실 운영 확대, 문화콘텐츠 특성화고, 예술고에 저작권 교육 확산, 학교단위 저작권 전문 교사제 도입 및 운영, 그리고 청소년 대상 '토요일에 만나는 저작권 교실'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호대책 추진으로, 경미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고 저작권 침해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악용한 국가 공권력의 사적 이용 방지와, 경찰 수사에 있어서 경미 저작권 고소사건 부담 경감 및 민생침해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찰 공권력의 효율적인 배분·작동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된다.

#### IV. OECD국가들의 저작권법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주요 외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이상수, 2008: 137-139). 먼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거나, 침해결과가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 또는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대상행위와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단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형사적 구제수단을 갖고 있으며, 민사적 구제로서 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정지명령(injunction), 일정액의 배상(account), 그 밖의 구제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형사적 처벌로는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죄의 경중에 따라 병과하고 있다.

셋째, 경미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 사전경고, 개인계정 삭제, 접속 차단 등의 비범죄화 방안을 일부 국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넷째, 저작권의 보호대상 권리 범위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보호대상 저작물 역시 음반, 영상, 인쇄 저작물, 실연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의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각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 또는 70년까지로 대체로 규정되어 있다.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lt;표 2&gt; 주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비범죄 및 처벌 종류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 위반범죄		
국가		비범죄화제도	형사처벌종류	비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	미국	.	징역형, 벌금형 병과	-저작권법 제506조 (a)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적인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
	캐나다	.	징역형, 벌금형 병과	.
	영국	불법다운로드 삼진아웃제	징역형, 벌금형 병과	벌금형 또는 최고 10년 이하의 금고형
	프랑스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중	징역형, 벌금형 병과	.
	독일	.	징역형, 벌금형 병과	일반적인 저작권침해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고 친고죄로 규정되는 반면에, 저작권의 영리적 침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일본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중	징역형, 벌금형 병과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엔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
	중국	.	징역형, 벌금형 병과	범죄행위로 규정한 죄의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좁은 바,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만 범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 태양에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다양하고 가능한 침해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한미FTA 협정문	.	징역형, 벌금형 병과	협정문 제18.10조 제27항 제바호
	대한민국	·삼진아웃제 ·청소년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징역형, 벌금형 병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여섯째, 주요 외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바, OSP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 18.10조 제10항에서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7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를 두고 있다.

일곱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종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징역형과 벌금

형을 병과하고 있으며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저작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침해 규모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와 (P2P,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복사된 서적, 테이프, CD, DVD 등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의미), 합법저작물 침해규모의 나눌 수 있다. 합법 저작물 침해는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기존의 합법 저작물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3%씩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합법저작물 시장침해 유통량은 연평균 14.5% 증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3)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 저작권 파파라치들의 무차별 고소·고발은 다수의 선량한 청소년을 범법자로 양산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조장할 수도 있고 디지털 혁명에 역행하여 자칫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폭증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첫째, 경미범죄의 과태료 부과 등 비범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8)</sup>. 특히 청소년들의 경미저작권 침해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과잉범죄화로 인한 범법자 양산으로 전과자 낙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그리고 범죄예방 효과의 악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김정순, 2011: 55). 이를 위해 청소년의 경미한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보기보다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여 같은 행정제재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경미 저작권 위반행위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재발억제 효과와 수사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상습성 여부, 영리성 여부, 피해 저작물의 수 및 피해금액 등 경미저작권 위반행위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이거나 청소년·초범인 경우, 경찰서장의 저작권 교육이수를 조건부로 한 훈방권을 도입하는 것도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8) 비범죄화는 이전까지의 범죄행위가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 형법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훈방이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자를 엄중하게 훈계한 후 즉시 대상자를 방면하는 훈계와 방면행위를 말한다. 이 역시 청소년 범죄방지를 위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diversion)<sup>9)</sup>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사의 ‘사전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역시 이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표 3> 비친고죄 대상 저작권법 위반행위

구분	침해행위	형벌
비친고죄 대상 행위 확대 (2006. 12. 28개정·시행(2006.6.28) 법)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136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제136조제2항제3호)	"
	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한 자(제136조제2항제6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연등을 한 자(제137조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타법령 이관에 따라 비친고죄로 추가	침해물을 배포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제124조제2항)한 자(제136조제2항제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수정·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기존 비친고죄 행위	저작권 등 허위등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제품 제공·전송 등을 하는 행위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제14조제2항(사망한 저작자의 명예훼손)의 규정을 위반한 자	"
	허가를 받지않고 신탁관리업을 한 자	"
	고의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신고를 하지않고 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한 자	"

9) 전환조치라고도 불리는 다이버전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의 위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 즉, 그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로 이해하는 견해와 시설내 처우를 사회내 처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이버전은 현실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의 부담가중,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어 경미한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내지 교정시설의 선별수용, 형사절차에서의 선별처리 등의 다양한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다이버전은 범죄인에게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수용을 방지하여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시설내 처우의 폐단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555&cid=487&categoryId=4727>



셋째, 경미저작권의 비친고죄화 전환에 대한 입장이다. 저작권 범죄는 허위등록 행위 등 몇 가지 행위를 제외한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告訴)가 있어야 공소(公訴)가 성립되는 이른바 친고죄(親告罪)이다<sup>10)</sup>. 하지만 최근 저작권이 산업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자 등이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알거나 대응하기도 어렵고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영리+상습적 침해행위)에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비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사권(私權)이지만 상표권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비친고죄 대상 행위를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표 3>과 같다(송영식·이상정, 2009: 453-454).

저작권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치열하나 미국과 독일의 입법에 의하면 대규모적인 침해나 공익적인 침해의 경우에 고소가 없이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비친고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부로 최소한 대규모 내지 기업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이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범위를 상당히 확대함으로써 이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경미저작권의 비친고죄화 전환을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지적재산권 시장 활성화라는 경제정책 목적 달성과 함께, 공익적 목적 달성 및 비효율적이고 미약한 민사적 구제수단 보완 차원에서도 형사처벌이 권리자 보호수단으로 매우 유효하기에 현재 입법수준에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상정 외, 2001: 101). 다만 경미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10) 형사상의 범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만이 공소의 제기 즉, 형사소추-검사가 특정범죄에 대한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일-를 할 수 있는데,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켜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고소를 일단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제140조).

11) 정부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5, p.232.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되어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협정문 제18·10조 제27항 제바호에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대규모의 복제행위나 이를 이용한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으로 하는 친고죄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입법조치가 요청된다.

## VI. 결 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절차상 특례방안으로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로 경찰서장이 훈방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종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교육이수 조건부 경찰서장 훈방권 행사 등 경찰 수사 절차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효과와 수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저작권 보호교육을 통한 계도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부딪히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09). 내부자료.
- 김정순 (2011). 인터넷상 청소년의 경미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절차상 특례방안. 충북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택 (2010). 공무원 윤리의 책임과 가치, 윤리적 딜레마. 한국부패학회보. 15(3): 55-82.
- 남미정·곽선화 (2011).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조직변인에 관한 연구 - 윤리풍토, 조직공정성, 금전욕 중심으로.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30(1) 39-69.
- 대검찰청 (2009). 청소년 인터넷 저작권침해사범 고소 증가에 따른 대책 시행. 2009. 2. 20. 발표 보도자료.
- 서울신문, 2013. 3. 8.
- 송영식·이상정 (2009). 저작권법개설(5판). 세창출판사.
- 오승중·이해완 (2007). 저작권법. 박영사.
- 오혜경 (2007). 윤리적 딜레마 대처방안. 문형구 외. 사회복지 윤리경영 교육실천 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97-323.
- 이관춘 (2007). 기업경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FILOP 방안. POSRI 경영연구 7(2).
- 이상수 (2008). 경미저작권법 침해행위 비범죄화 및 비친고죄화 방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이상정 외 (2001). SW저작권과 관련한 친고죄와 단속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연구보고서 2001-01.
- 정부 관계부처합동 (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 5.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013).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저작권 통계 제2권 발간 보도자료. 2013년 9월 4일.
- 허 인 (2011).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단국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지적재산권의 규제기준』 학술대회 토론문.
-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13). 청소년 윤리의식 실태조사 결과. 2013년 1월 7일.
- Blanchard, K., and N. V. Peale. *The Power of Ethical Management*, New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8.
- Boughman, J. A. (2007). Conflict of Interest: The "Interest" of ASHG.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80(2).
- Boyd, D. M., & Ellison, N. B. (2008).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 Browne, M. N., D. Giampetro-Meyer, and C. Williamson (2004). *Practical Business Ethics for the Busy Manager*,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 Buchanan, Bruce & Jeff Millstone (1983), "'Public Organization: A Value-Conflict View,'" in Felix A. Nigro and Lloyd G. Nigro, *Readings in Public*

- Administra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Green, R. M. (1994). *The Ethical Manager: A New Method for Business Ethics*, New Jersey: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Stahl, Glen O. (1971). *Public Service Ethics in a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pp.245 ~ 259.
- Trevino, L.K., and K. A. Nelson (2004). *Managing Business Ethics : Straight Talk about How to Do It Right*, New Jersey : Wiley.
- Wikipedia (2012). Social networking service.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networking\\_service](http://en.wikipedia.org/wiki/Social_networking_service)

투고일자 : 2013. 11. 15

수정일자 : 2013. 12. 20

게재일자 : 2013. 12. 30

국문초록

##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의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수(한국공공자치연구원)

본 연구는 저작권법 위반 등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Blanchard & Peal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하여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경미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적·조직적 수준의 윤리적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미저작권 침해범죄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갈등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 수사절차상 특례방안으로 경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부과로 전환하고, 청소년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이수 조건부로 경찰서장이 훈방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종결을 하는 윤리적 딜레마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수 조건부 경찰서장 훈방권 행사 등 경찰 수사 절차상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효과와 수사절차 간소화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저작권 보호교육을 통한 계도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부딪히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윤리적 딜레마를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윤리적 딜레마, 저작권 침해범죄, 윤리적 의사결정과정